

한동훈 “與 변화·쇄신 주도해야… 첫걸음이 ‘특별감찰관’”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尹·김건희 여사 직접적 언급 없어
공멸 가능성에 발언 수위 낮춘 듯
특별감찰관 질문에 “관철될 것”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제도 논의 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면담’ 이후 강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한번 더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선 윤·한 면담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당내 중진들의 우려 등이 나오고 여권의 공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자들이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한 대표는 “미래의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것인데, 조심 안할 것인가.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공개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사하는 특별감찰관 국회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후보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국장감사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 해법에 대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 문제를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기관”이라며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리다면, ‘민심을 알긴 하는거야’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룬 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얽힌 여러가지 문제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생기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의 여러 문제들이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격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과 대해서 적극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의 당대표로서의 고충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저는 당의 중요 업무들을 통할하는 당 대표 입장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인지 원외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역할의 문제이고 임무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다.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몸을 던져서 당, 진영,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보수원로’ 윤여준 만난 이재명… 당정 ‘불통’ 토로

〈전 환경부 장관〉

윤여준 “尹, 지지도 높이는 게 급선무”
후 “대화 없는 것이 제일 답답해”
회동 이후 민생경제 간담회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학교 법대 스승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얼룩진 원내에서 벗어나 원외에서 진영을 초월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신속히 여야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에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원로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저희 같은 사람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국제환경이나 빠지면 그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악

순환”이라고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민생이 국정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힘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는 모습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세상사라는 것이 길이 없어보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이 생기지 않나”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의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여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 회동 이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尹, ‘4대개혁’ 의지… 개각·인적쇄신 가능성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운영 동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교체 거론

오는 11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성과를 연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에 속도가 날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드라이브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동력이 약화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근로시간 유연제나 정년 연장 등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혁 드라이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임기반환점을 계기로 개각이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기 초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국방정보본부 “北, 전선투입 개연성 있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어
쿠르스크 전장 이동 임박은 사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성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는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 회의장 밖에서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성권 간사는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전선으로 투입됐다는

것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이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정보본부의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공식적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후방침투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가 평원 개활지인 쿠르스크 전투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하는데 북한군은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훈련을 못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